

민주당,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재추천 요구 등 야당 비토권 부여 與 반대 가능성...거부권 행사 시 국조 강하게 요구할 듯 양부남 "檢,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법정연금'으로 탄압"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이들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검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검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천된 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안으로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외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야당에 일종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공작'도 법안에서 제외돼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보 공작 부분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면 그 내용을 담야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앞선 채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다른 카드를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도



순직해병특검법안 제출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조국혁신당 정춘생·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은 어렵다고 보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

정조사를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 날을 세우는 상황

도 여야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를 맡은 당내 정책연구 모임인 '더여민포럼'은 이날 오

전 국회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난했다.

김사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은 토론회에서 "법정연금(法廷軟禁)이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해 이재명 당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서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방해해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받는 모든 사건의 재판을 서울 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또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기자

검정 교과서 5종 '여순사건'='반란' 표현

반란·반군·폭도 등 특별법에도 없는 단어 사용 김문수 "尹 정부 교과서 매우 부적절...분노 느껴"

윤석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수·순천 10·19사건 부분에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에 따르면 A출판사는 '반군'과 '반란 폭도' 단어를 사용했다. B출판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현했다. C출판사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를 사용하며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라는 문구를 넣었다. D출판사는 '반군', E출판사는 '반란군'과 '반란 가담자'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4개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반란' 등의 용어가 없었다. 현행 특별법에서도 '반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들 5개 검정 교과서들이 굳이 '반란'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목된다.

실제 2021년 제정돼 2022년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에 해당 단어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법에도 없는 표현이 교과서에 버젓이 실린 것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부분에서 '반란' 등의 단어가



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들 5개 검정 교과서들이 굳이 '반란'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목된다.

실제 2021년 제정돼 2022년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에 해당 단어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법에도 없는 표현이 교과서에 버젓이 실린 것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부분에서 '반란'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작성기획단'에 극우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교과서까지 극우 이념과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는 10월5일 마감되는 조사 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시-개혁신당, '오월 동행' 이어간다

천하람·이준석·이주영 의원실에 감사 현판 부착

광주시와 개혁신당의 '오월 동행'이 계속된다.

강기정 시장은 '국회, 광주의 날'이 틀짜인 3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천하람·이준석·이주영 국회의원회와 환담하고 의원실 입구에 감사 현판을 함께 부착했다. 감사 현판에는 '국회 956송이를 바치며 오월 영령을 위로해주시는 개혁신당 의원님에게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오월 정신을 계승해 가겠습니다'는 문구가 담겼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준석·이주영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국회 1천송이를 들고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안장된 956기 묘비를 닦으며 헌화·참배했다.

강기정 시장은 "1천송이의 국화와 함께 오월광주의 친구가 돼 준 개혁신당에 감사드립니다"며 "1980년 5월 고립되고 외로웠던 광주의 손을 잡아준 덕분에 광주는 많은 친구가 생겼고 대한

민국 민주주의의 상장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천하람 국회의원회장은 "1980년 광주를 살 아내이고 민주화를 이룩하신 모든 분들이 영웅인 만큼 5·18민주화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참배했다"며 "개혁신당의 진심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합소평몰과 같은 플랫폼 도시를 향한 광주의 미래에도 함께 하며 광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회의원회장은 "묘역에 계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열사들 중에 누구 한 분이 더 중하고, 덜 중한 분이 없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다"며 "특히 2묘역을 찾았을 때 생전에 저를 아껴주신 정동년 이사장님 등이 계신 것을 보고 진짜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 광주와 많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강 기자

문금주 '아동성범죄 신속 대응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3일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 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다투고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



포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분 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